

#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 이 나 경<sup>1</sup>

<sup>1</sup> 서울대학교

### | 초 록 |

저출산·고령화, 실업률 악화, 소득 양극화로 사회경제적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청년세대 13,018명과 중장년세대 16,306명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세대 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고, 청년세대의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를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세대는 중장년세대에 비해 복지증세 수용태도와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이 낮은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결속형은 낮고 교량형은 높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청년세대의 사회자본 구성요인 중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은 각각 복지증세 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매개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형성된 청년세대의 자원 손실 회피 성향이 제도 및 타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병행하는 구조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청년세대

###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미래 복지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복지 인식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현 청년세대는 성장과정에서 경쟁 심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구조, 디지털 기반 소통방식의 변화와 COVID-19 이후 비대면 상호작용의 확대 등을 경험해왔으며, 이는 사회자본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간 사회자본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청년세대의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9-2023년 5개 연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세대 구성원의 경우, 복지증세 수용태도와 사회적 자본 중 결속형 네트워크,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이 중장년 세대 구성원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이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매개하여 청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들의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질적 회복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경계심의 완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투 고 일: 2025. 08. 04.

■ 수 정 일: 2026. 04. 01.

■ 게재확정일: 2026. 05. 06.

## I. 서론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며 정책 문제 또한 평범한 문제에서 보다 사악한 난제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문제정의, 정책 목표 및 대안 채택에서 주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상호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박치성 외, 2018). 본 연구는 정치 성향 및 성별을 중심으로 집단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소득 양극화와 같은 문제는 복지정책을 통한 대응을 요구하며,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 역시 두드러진다. 대한민국의 2030 청년세대는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복지 부담을 감당해야 할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초고령화와 인구 절벽 현상으로 미래에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지 인식은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이슈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 청년층은 경쟁 심화와 고용 불안정 등을 경험하며 위험 인식과 자원 손실 회피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양극화와 집단 간 혐오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는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복지 증세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제도에 대한 믿음(거시적 요인)과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믿음(미시적 요인)이라는 조건적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증세와 같은 정책 논제에 대한 수용성은 단순히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나 제도에 대한 신뢰(제도적 요인)와, 정책의 수혜자 혹은 부담 주체가 되는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사회적 요인)라는 이중 조건의 충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Hetherington, 2005; Rothstein & Stolle, 2008). 이에 본 연구는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간 복지증세 수용태도 및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다음, 사회적 자본이 청년세대의 복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용과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개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는 첫째, 사회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와 그 한계를 검토한 후, 둘째,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형성하는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셋째,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들의 순서로 구성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 1.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대한민국의 법령과 정책에서 청년 연령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 39세까지 확장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 독립, 혼인 및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주기 시점이 늦어진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청년세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이후 입시·취업·이직 과정에서 극심한 경쟁을 경험하며 강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을 형성한 세대를 지칭한다(전종우, 2020). 이들은 세대 이론 틀에 비추어 볼 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인 MZ세대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에 반해 중장년세대는 현재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를 포괄하는 집단으로, 민주화 세대 및 X세대에 해당하며 과거

학생운동과 산업화를 경험한 이후 기성세대로 진입하여 복지 및 분배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로 정의된다(김영순, 노정호, 2017; 황선영 외, 2019).

## 2. 복지증세 수용태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복지증세 수용태도이며, 이와 유사 개념인 복지의식 및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복지의식은 사회복지 및 복지지출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가치와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김영순, 여유진, 2011: 213-214; 조정하, 김성한, 2018: 4). 반면 복지태도는 이러한 의식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행동성향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보다 직접적인 지지 및 거부 의사를 반영한다(Taylor-Gooby, 1985; 강정규, 2014; 이민호, 2021: 10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복지증세 수용태도를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정도'로 살펴보려 한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질 및 신뢰(이지호, 황아란, 2016; 이승주, 박소영, 2019),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주혜린, 황정운, 2020), 지역(함철호, 이중섭, 2010)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인구학적 특성이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all & Jaques, 1989; 안상훈, 2000; 손병돈, 2016; 이민호, 2021). 최근에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및 경제적 안정성의 감소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 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특성 차이와 복지증세 수용태도

중장년세대는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를 이루고 있다. 중장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민주화세대 및 X세대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민주화세대는 학생운동이 대중화되었던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김영순, 노정호, 2017),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으며 높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 및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다(황선영 외, 2019).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성세대에 진입하여 분배 가치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 또한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한편, X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교차하는 시기에 성장하며 개인주의적 가치와 실용주의적 태도를 형성한 세대이다. 이들은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안정적인 복지보다는 자기 책임과 시장 중심적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X세대의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만나는 현 청년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입시, 취업, 이직 등에 있어 극심한 경쟁을 겪으며 정체성을 닦아온 세대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더욱 강한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관찰된다(전종우, 2020). 이와 함께 최근 연구들은 청년세대가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와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승운 외, 2016).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은 청년세대로 하여금 복지정책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조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다. Lipset and Man(1960)은 경제적 안정성과 정치적 신념이 세대별로 달라짐에 따라 복지정책 지지성향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Korpi(1983)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차별화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볼 때, 김신영(2023: 22)은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별 평균 차이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지를 위한 증세 태도에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이 발견되

었다. 이상록, 김형관(2021: 279) 또한 동일한 자료로 분석하였을 때 복지태도의 이중성이 계층 및 세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년층 및 상위 소득계층에서 복지확대 찬성과 복지증세 반대를 동시에 하는 이중태도가 두드러졌으며, 노년층에서는 복지확대에는 반대하며, 동시에 복지 증세에는 찬성하는 다른 유형의 이중태도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의 '복지확대 찬성-복지증세 반대'라는 이중적 태도는 단순히 이기적 선호나 사회적 연대의 결핍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위험 인식과 자원 손실 회피라는 인지-심리적 기제를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손실회피현상(loss aversion)에 따르면 개인은 동일한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확실한 손실로 인식되는 선택지를 강하게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Kahneman & Tversky, 2013). 복지증세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라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는 현재 시점에서의 소득 감소라는 확실한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손실회피 성향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나아가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서는 개인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자원들을 획득하고 보호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Hobfoll, 1989). 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이를 잃을 위기감에 더 민감해진다. 사회지위는 자원보존이론에서 논하는 중요한 자원 집합이다. 따라서 자원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자원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와 민감도가 증폭된다. 현 청년세대는 중장년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성취 기대 속에서 성장했으며, 입시-취업-이직에 이르는 전 생애 초기 경로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도태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층에게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그 결과, 복지증세와 같이 자신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형성하게 만든다. 즉, 청년층의 낮은 복지증세 수용성은 경쟁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질적 약화가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경유하여 정책 태도로 전이되는 구조적 경로로 설명되며, 이 과정에서 자원 손실 회피와 위험 민감성이 중요한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세대 간 사회적 경험 차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성향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증세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청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는 중장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보다 낮을 것이다.

### 3.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 가. 사회적 자본의 개념

다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Bourdieu, 1986), 사회구조 속 조직과 개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Coleman, 1988), 구성원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증진하는 자원(Putnam, 1995), 그리고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실제적-잠재적 자원의 총합(Nahapiet & Ghoshal, 1998)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Grootaert(1986), Coleman(1988), Ostrom(1990), Putnam(1995), 한상미(2007), 홍영란(2007), 박태정(2017) 등이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사회적 규범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맺고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연결 구조를 의미하며(Emirbayer & Goodwin, 1994; Putnam, 1995; Scott, 2011), 대인신뢰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규범에 따라 정직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뜻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Luhmann, 2000; Fukuyama, 2002; Robbins, 2012). 또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직접적 보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 일반을 향해 도움과 협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상호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규범적 기대를 의미한다(Gouldner, 1960; Sahlins, 1972; Keohane, 1986; 장충권, 2005).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하였다.

현 청년세대는 경제 불안정과 입시 및 취업 경쟁의 심화 현상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제한하였다(한국은행, 2023). 또한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면 상호작용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향후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책 위험 인식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 불신, 사회참여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사회자본학자 Putnam(2000)은 최근 세대로 내려올수록 사회적 자본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할 때, 현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중장년세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들의 성장 과정과 시대적 환경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중장년세대의 사회적 자본보다 낮을 것이다.

#### 나.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자본과 복지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점차 확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의 축적은 제한적인 편이다(이영수, 2025; 박찬웅 외, 2014; 김신영, 2009).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결속 및 유대감, 공동체 의식, 시민적 책임의식 측면에서 복지태도 형성 요인을 논의해 왔다. Ervasti 외(2012)는 유럽사회조사(ESS)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30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Kumlin and Rothstein(2005)은 사회적 자본이 복지정책의 결과이자 동시에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하며, 양방향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Van Oordt(2019)는 국가비교를 통해 사회적 연결이 넓어질수록 사회구성원 간 나타나는 집단적 정실주의와 이로 인한 배타적 성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 분배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 조세 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강정규(2014)는 지역사회 환경과 사회적 자본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김민주(2017) 또한 61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소속감 및 동일시 기제를 통하여 설명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Li(2010)는 조세의 동기에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시민들의 공동체 소속감 및 정체성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urner 외(1987)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에서 인식하는 정체성과 집단소속감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uttmer(2001)는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타 집단에 대한 인식과 집단 간 신뢰수준에 의해 영향받는다 고 하였다. 지역사회 내 복지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는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가 자신과 동일한 집단에 속할 경우 복지지출 지지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분배 태도가 단순한 소득 이전 선호가 아니라, 집단 동일시와 신뢰에 의해 영향받음을 설명하였다. Klor & Shaoy(2010) 또한 개인이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집단을 위해 자신의 복지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집단의 복지를 높이려는 경향을 낙인효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종합할 때,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과 복지태도 및 분배정책지지 간 정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다수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이라는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태도로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증세 수용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간 이질성이 충분히 구별되지 않았거나, 각 구성요소가 정책 태도 형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 및 타 집단 수용성 같은 중간 기제의 역할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 4.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및 사회적 관용

##### 가. 정부신뢰의 개념

앞선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형성하는 이론적 기제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 경로를 중심으로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어떠한 심리·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증세 수용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특히 복지 확대에 대한 일반적 지지와 달리, 개인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복지증세 수용은 정부의 재정 운용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와 복지 수혜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전제될 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은 사회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신뢰는 크게 신뢰의 대상에 따라 인적 신뢰와 시스템 신뢰로 분류된다(Zucker, 1986; Luhmann, 2000). 인적 신뢰란 사람에 대한 신뢰이며, 비인적 신뢰란 시스템 혹은 제도의 안정적 작동여부에 관한 신뢰이다. 본 연구는 전자인 인적 신뢰 개념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와, 후자인 비인적 신뢰의 제도신뢰 개념 중에서 정부신뢰를 다루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를 정부 운영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요구를 구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해 왔다(Muller, 1977; 박천오, 1999). 이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 지지, 그리고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손호중, 채원호, 2005; 이승중, 2010). 최근 진행된 일련의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치적 지지나 정권 평가와 구분하여,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공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인지적 평가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박희봉, 2018; Mishra & Attri, 2020; Hitlin & Shutava, 2022).

##### 나.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을 정부신뢰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 그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 둘째,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상호 연관되며 구조적으로 동시에 형성된다고 보는 연구들, 셋째, 사회적 자본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결과로 이해하는 연구들의 흐름이다.

사회적 자본을 정부신뢰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 그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Boix and Posner(1998)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질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공동체 결사체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정부관료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질이 높아지도록 일조함으로써 정부신뢰 또한 함께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Lipset & Schneider, 1983; 장수찬, 2002). Bäck and Kestilä(2009)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대인신뢰가 정치인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반면, 결사체 참여의 효과는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사회적 자본의 질적 측면이 정부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사회적 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전이효과를 통해 설명한 연구들이다. Misztal(2001), Uslaner(2002)는 대인신뢰가 타인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신뢰의 전이를 통해 정치적 행위자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인지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rehm and Rahn(1997) 또한 정부신뢰는 일반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의 일반화이거나 반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타인들 또한 법과 정치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양자 간 간접적 연관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다. Putnam(2000), Pharr and Putnam(2000)의 경우,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이라기 보다 간접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재원(2000)은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로서 결사체 참여, 정치 참여, 정부기관 신뢰 사이 순환의 고리를 제시하였으며, Newton and Norris(2000) 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 대인신뢰와 정치제도 신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대인신뢰가 정부신뢰로 직접 연결되기보다, 공정성·정부성과 인식 등 중간 기제를 통해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최근 연구의 흐름에서 확인되고 있다(Jhang, 2022; 김동욱·홍상우·이숙중, 2023).

그 다음으로 Rothstein and Uslaner(2005), Kumlin and Rothstein(2005). Rothstein and Stolle (2008)은 공정하게 작동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시민 간의 대인신뢰를 촉진함으로써 제도적 질에 의해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위 논의들은 사회적 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공정성·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다양한 인과 방향에서 풍부하게 논의해 왔으나, 사회적 자본 내 하위 구성 요소별 차별적 작동 경로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으로 구분하여 변인 간 관계를 정교화하고자 한다.

#### 다. 사회적 관용의 개념

Walzer(1997)에 의하면 관용은 문화적·정치적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소극적 관용은 차이에 대한 소극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적극적 관용은 타인이 나와 다른 점에 대해 배우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관용의 개념은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원숙연, 2017). 먼저, 사회적 관용은 Walzer(1997)에 따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선호하지 않거나 혹은 통용되는 사회적 관행을 거스르는 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된다. Hadler(2012)는 사회적 관용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이질적인 집단을 자신의 이웃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개념은 타인 혹은 타 집단에 대해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인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되어 있다(Bogardus, 1933; 원숙연, 정하나, 2014). 최근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집단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관용이 약화되며, 이를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Crepaz & Damron, 2009; Rapp, 2016; Hadler, 2012).

반면 정치적 관용의 경우, 개인이 대상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아닌, 사회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 관행을 거스르는 집단에게 시민으로서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된다(Lee, 2014: 713).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해당 집단에게 시민권과 같은 정치적 발언 혹은 공적 발언권 등 공적 자원을 제공할 의향으로 표출되어진다(Weber, 2003; 원숙연, 2017). 본 연구는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높은 청년 실업률, 심화되고 있는 집단 갈등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관용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 라.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관용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관용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Putnam(1995)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차가워진다고 하였다. 그는 20세기 후반의 정치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공동체와 단절된 사람들은 극단주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통합을 저해시킨다고 하였다. 금희조(2011) 또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 관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관용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연결됨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련하여, Cooley(1972)는 명경자아이론을 통해, 자아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김은미(2018)는 개인은 타인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기에, 사회적 연결됨은 정신적 유연성과 관용을 발달시킨다 하였다. Duck(2010) 또한 인간관계는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 관련 개념인 사회적 지지 논의를 살펴보면 Cohen 외(2000)는 사회적 지지가 타인에 대한 전반적 인지적 평가, 사회적 역할, 동료애, 친밀감 등을 발동시키며, 이는 타인을 수용하는 관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이 개인의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적 관용을 확장함으로써 복지수혜집단에 대한 배제적 인식을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별로 사회적 관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차별적 설명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적 요소, 대인신뢰와 같은 인지적 요소, 일반화된 호혜성과 같은 규범적 요소가 관용 형성에 어떠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각 요소가 사회적 관용 형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라는 제도적·사회적 인식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자본과 증세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 구조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5.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가. 정부신뢰와 복지증세 수용태도

복지증세 수용은 복지확대 일반 지지에 비해 보다 더 강한 정책 태도로서,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복지수혜집단에 대한 포용이 결합될 때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실제로 정부신뢰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지지와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복지증세 수용이 단순한 정책 선호가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 즉 정부신뢰에 의해 강하게 조건화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이념, 복지 수혜 경험은 복지의식과 증세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Craig et al., 2006), 국가 수준 분석에서도 정부의 질과 제도적 신뢰는 복지태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이현우, 2013; Rothstein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신뢰는 정부 주도의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 정책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논의되어 왔으며(손병돈, 2016), 특히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결여될 경우 복지증세와 복지제도의 확대에 있어 제약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긍정적 효과가 체감 조세부담 수준에 따라 약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Lim & Moon, 2022), 정부신뢰가 어떠한 사회적·인지적 자원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원의 질적 축적과 제도에 대한 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증세수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관계를 정부신뢰가 매개할 것이다.

#### 나. 사회적 관용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한편 사회적 관용은 복지 수혜집단을 외집단으로 낙인화하는 경향을 완화함으로써, 복지지출 확대 및 이를 위한 증세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이민·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복지국가 지지의 결합을 다루는 일련의 연구들은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될 때 분배정책지지 및 복지 수혜에 대한 정당성 인정이 약화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Alesina, Miano, and Stantcheva(2023)는 미국과 5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민자에 대한 복지 의존적·무임승차적 인식이 강화될수록 재분배 및 복지지지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Stantcheva(2024)는 이민자를 복지 의존적 외집단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경우 재분배 지지가 감소함을 보여주며, 이는 복지 수혜자를 외집단으로 낙인화할수록 분배정책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배타적 관점 및 복지수혜집단에 대한 편견을 통해 사회적 관용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정체성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82)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집단(out-group)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경향은 복지 수혜자를 외집단으로 인식할 경우, 복지정책, 특히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에 기반한 내집단-외집단 구분은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편향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집단을 열등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구조적 억압으로 연결될 수 있다. Young(1990)에 따르면, 이러한 억압은 특히 문화적 제국주의와 주변화의 형태로 나타나며, 복지수혜집단을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한 집단으로 낙인화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점에서 Tajfel의 사회정체성이론이 설명하는 심리적 범주화는 Young이 논의한 억압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용은 이러한 억압의 인지적·규범적 기반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병돈(2016)은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며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의 유대성과 외집단의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배타성을 완화시키고 집단 소속감의 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하는 사회적 관용의 증가는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아름, 김사현(2010) 또한 복지태도의 부정적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개인주의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Gilens(1995)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복지 수혜자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흑인이나 빈곤계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사회적 계급,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서 주로 이뤄져 오던 복지의식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의 지평을 대중 개개인의 정서와 태도적 측면으로 확장했다는데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종합할 때, 높은 사회적 관용으로 인하여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구분이 약해짐에 따라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이 높아질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용이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낙인 인식을 완화함으로써 복지 및 재분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로 이민·다문화 맥락이나 정체성 편향 차원에서 논의해 왔으나, 사회적 관용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과 연계하여 그 형성 경로와 복지증세 수용태도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종합해 볼 때, 기존 논의들은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 사회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4.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관계를 사회적 관용이 매개할 것이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 매개하는 경로를 가정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다.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본, 매개변수로는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 종속변수로 복지증세 수용태도를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내 신뢰와 연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신뢰와 정의 연관관계에 있으며(Brehm & Rahn, 1997; Boix & Posner, 1998; Newton & Norris, 2000), 동시에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도 정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Putnam, 1995; 금희조, 2011; Duc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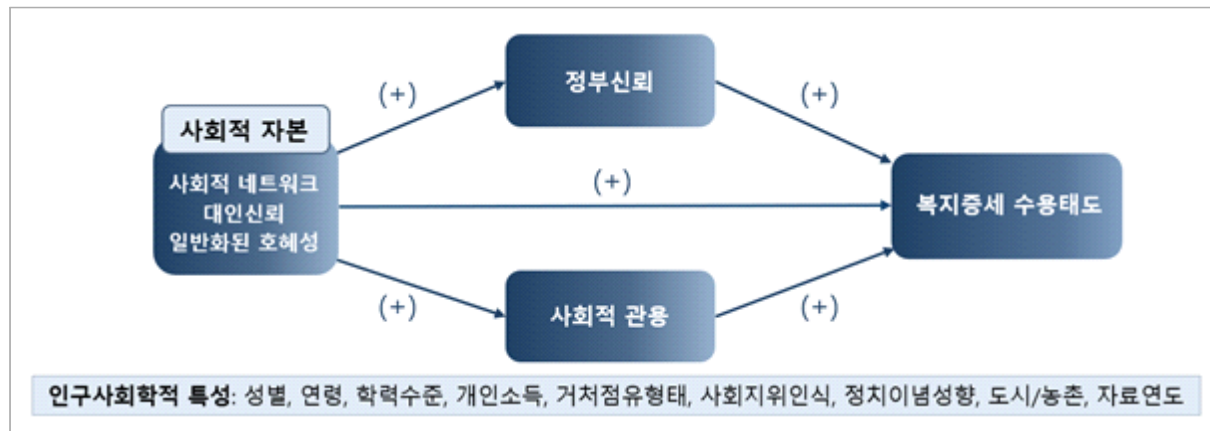
연구가설 1. 청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는 중장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보다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중장년세대의 사회적 자본보다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관계를 정부신뢰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관계를 사회적 관용이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 방법

### 가.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회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축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9, 2020, 2021, 2022, 2023년 5개 연도 자료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국갤럽에 의해 행해져 왔으며,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 인식과 가치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민대통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화확률비례추출을 통해 표본추출된 대상에 대하여 면접조사원의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청년세대에 제한하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 당시 만 19세에서 만 38세 사이 연령의 남녀 13,01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 집단인 중장년세대의 경우, 조사 당시 만 39세에서 만 58세 사이 연령의 남녀 16,3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 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복지증세 수용태도이며,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리커트 11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sup>1)</sup>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며, 선행연구(Grootaert, 1986; Coleman, 1988; Ostrom, 1990; Putnam, 1995; 한상미, 2007; 홍영란, 2007; 박태정, 2017)를 바탕으로 이를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대인신뢰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을 의미한다. 셋째, 일반화된 호혜성은 도움을 받은 자가 그 도움을 준 당사자가 아닌, 그 사회에 속한 제3자에게 도움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상이 간접적으로 되돌아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호혜성은 개인이 자신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돕는 것이

1) 본 문항은 조세 부담이 명시된 재분배적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태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편적 복지 전반이나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로 일반화되기보다는 재분배적 조세 기반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옳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규범적 태도를 의미하며(Gouldner, 1960; Putnam, 1995; Rothstein & Stolle, 2008),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상호 도움 및 상호 의무감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우 ‘하루 접촉하는 가족 및 친지의 수’ 5점 척도 문항과, ‘하루 접촉하는 가족 및 친지가 아닌 사람 수’ 7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개별적으로 각각 표준화한 뒤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대인신뢰의 경우 일반 사람, 이웃, 지인,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4점 척도의 5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경우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4점 척도 2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이다. 정부신뢰는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4점 척도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관용의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장애인, 결손가정자녀, 외국인 이민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5점 척도 6개 문항과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점 척도 문항을 표준화한 뒤 합산하여 사용하였다.<sup>2)</sup> 통제변수로는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매개하여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거주점유형태, 학력수준, 개인소득, 도시/농촌 거주여부, 사회지위인식, 정치이념성향, 자료연도를 고려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시점이 상이한 자료를 결합한 pooled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연도에 따른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자료연도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문항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측정도구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복지증세 수용태도	•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정도 (리커트 11점 척도: ① 전혀 없다 ~ ⑪ 매우 많다)
독립	사회적 자본	대인신뢰 •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일반 사람들 (2)이웃 (3)지인 (4)처음 만난 사람 (5)국내거주 외국인 (리커트 4점 척도: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④ 매우 신뢰한다)
		일반화된 호혜성 •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리커트 4점 척도: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④ 매우 동의한다)
		•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리커트 4점 척도: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④ 매우 동의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 귀하는 평일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 (가족 또는 친척) (5점 척도: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명 이상) • 귀하는 평일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 (가족 또는 친척 이외) (7점 척도: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19명 ⑥ 20~49명 ⑦ 50명 이상)
매개	정부신뢰	•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1)중앙정부 부처 (2)국회 (3)법원 (4)검찰 (5)경찰 (6)지방자치단체 (7)공기업 (8)군대 (리커트 4점 척도: ① 전혀 믿지 않는다 ~ ④ 매우 믿는다)
사회적 관용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장애인 (2)결손가정자녀 (3)외국인 이민자 (4)전과자 (5)동성애자 (6)북한이탈주민 (리커트 5점 척도: ① 불가능함 ② 이웃 ③ 직장동료 ④ 절친한 친구 ⑤ 배우자)	
	•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리커트 11점 척도: ① 전혀 동의 안 함 ~ ⑪ 매우 동의함)	
통제	성별	• 남 = 1, 여 = 0

2) 사회적 관용은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 문항을 통해 조작화되었으며, 이는 관용을 공식-일상적 관계에서의 배제 여부로 측정해 온 기존 경험적 연구 전통에 따른 것이다.

변수명	조작적 정의
연령	• 만 19~만 38세(청년) • 만 39~만 58세(중장년)
거처점유형태	① 단독 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주택 ④ 기타
학력수준	①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4년 미만) ⑥ 대학교 (4년 이상) ⑦ 대학원 석사 ⑧ 대학원 박사
개인소득	• 소득없음 /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600만원 / 600~700만원 / 700~800만원 / 800~900만원 / 900~1,000만원 이상
사회지위인식	① 매우 낮음 ~ ⑩ 매우 높음
정치이념성향	•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트 5점 척도: ① 매우 보수적 ~ ⑤ 매우 진보적)
도시/농촌	① 도시 ② 농어촌
자료연도	① 2019 ② 2020 ③ 2021 ④ 2022 ⑤ 2023

#### 다.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하위 요인의 구분 가능성과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은 각각 단일 차원으로 측정되는 이론적 구성개념으로서,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수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각 변수의 내적 일치성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인 사회적 네트워크(0.601), 대인신뢰(0.620), 일반화된 호혜성(0.683)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정부신뢰(0.866)와 사회적 관용(0.706) 또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인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는 직각회전 방법인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Varimax 회전을 통해 요인 구조를 해석한 결과, 대인신뢰 문항은 요인1에, 호혜성 문항은 요인2에, 사회적 네트워크 문항은 요인3에 부하되었다. 요인부하량은 모두 0.3 이상이었으며, 이는 측정 항목이 각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사회적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하루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의 수, 가족 및 친척 제외한 접촉자 수)	0.601
	대인신뢰 (일반, 이웃, 지인,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0.672
	일반화된 호혜성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이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함,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0.683
정부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군대)	0.866
사회적 관용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외국인 이민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0.706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변인	측정문항	Factor1 적재량	Factor2 적재량	Factor3 적재량	Communality
사회적 네트워크	하루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의 수	0.548	0.053	0.0102	0.303
	하루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사람 수	0.559	0.034	0.0182	0.314
대인신뢰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	0.063	0.358	0.119	0.146
	이웃에 대한 신뢰	0.024	0.446	0.187	0.235
	지인에 대한 신뢰	0.096	0.341	0.113	0.139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0.013	0.752	-0.046	0.568
	외국인에 대한 신뢰	-0.019	0.724	-0.043	0.526
일반화된 호혜성	나은 처지의 이들이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함	0.011	0.069	0.631	0.403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0.021	0.121	0.620	0.399
고유값 (Eigen value)		0.611	1.631	0.792	-
분산 (Variance)		0.628	1.558	0.848	-
누적 설명률 (Cumulative)		1.288	0.662	1.022	-

### 라. 분석 방법

Stata 19.0 및 SPS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합산한 5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세대 남녀 13,018명과 중장년세대 남녀 16,306명의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매개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년세대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 6,289명(48.38%), 여성 6,720명(51.62%)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7,679명(58.99%)이었으며, 이는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이어졌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현 청년세대의 고학력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 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구간은 200~300만원 미만(4,472명, 34.35%)으로, 이는 300~4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구간 순으로 이어졌다. 정치이념성향의 경우, 중도적 정치이념성향(7,169명, 55.0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다소 진보적 성향(3,932명, 30.20%), 다소 보수적 성향(1,349명, 10.3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장년세대의 경우, 학력수준은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고등학교 졸업(7,356명, 45.11%), 그 다음이 4년제 대학교 졸업(3,342명, 20.50%)으로 나타나,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 학력이 가장 많았던 청년세대와 달리, 중장년세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구간은 200~300만원 미만(4,005명, 24.56%)으로, 이는 300~400만원 미만 순으로 이어졌다. 중장년 집단의 정치이념성향의 경우, 중도적 정치이념성향(7,906명, 48.49%)이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소 진보적(3,746명, 22.97%) 응답과 다소 보수적(3,748명, 22.99%) 응답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개인적 특성

변수	응답	청년 (N=13,018)		중장년 (N=16,306)		변수	응답	청년 (N=13,018)		중장년 (N=16,306)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자	6,298	48.38	8,172	50.12	안 받음	1	0.01	10	0.06	
	여자	6,720	51.62	8,134	49.88		초등학교	7	0.05	102	0.63
연령	(청년) (중장년) 19-28 / 39-48	6,662	51.18	7,642	46.87	중학교	31	0.24	400	2.45	
	(청년) (중장년) 29-38 / 49-58	6,356	48.82	8,664	53.13	고등학교	1,690	12.98	7,356	45.11	
거처	자기 집	7,004	53.8	12,380	75.92	대학교(4년 미만)	3,399	26.11	3,342	20.50	
	전세	3,728	28.64	2,695	16.53	대학교(4년 이상)	7,679	58.99	4,871	29.87	
점유 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	2,013	15.46	1,024	6.28	대학원 석사	184	1.41	187	1.15	
	보증금 없는 월세	95	0.73	52	0.32	대학원 박사	27	0.21	38	0.23	
사회 지위 인식	무상	178	1.37	155	0.95	소득 없음	3,243	24.91	2,750	16.86	
	0점(매우 낮음)	60	0.46	56	0.34	100만원 미만	705	5.42	668	4.10	
사회 지위 인식	1점	68	0.52	80	0.49	~200만원 미만	1,558	11.97	2,013	12.35	
	2점	297	2.28	270	1.66	~300만원 미만	4,472	34.35	4,005	24.56	
사회 지위 인식	3점	783	6.01	808	4.96	~400만원 미만	2,297	17.64	3,922	24.05	
	4점	1,316	10.11	1,503	9.22	~500만원 미만	485	3.73	1,789	10.97	
사회 지위 인식	5점(보통)	4,256	32.69	5,451	33.43	~600만원 미만	145	1.11	670	4.11	
	6점	2,785	21.39	3,592	22.03	~700만원 미만	53	0.41	236	1.45	
사회 지위 인식	7점	2,347	18.03	3,052	18.72	~800만원 미만	25	0.19	126	0.77	
	8점	955	7.34	1,306	8.01	~900만원 미만	17	0.13	48	0.29	
사회 지위 인식	9점	123	0.94	159	0.98	~1,000만원 미만	11	0.08	24	0.15	
	10점(매우 높음)	28	0.22	29	0.18	1,000만원 이상	7	0.05	55	0.34	
도시/농촌	도시	1,902	14.61	3,128	19.18	매우 보수	148	1.14	467	2.86	
	농어촌	11,116	85.39	13,178	80.82	다소 보수	1,349	10.36	3,746	22.97	
자료 연도	2019	3,058	23.49	3,590	22.02	중도	7,169	55.07	7,906	48.49	
	2020	2,670	20.51	3,217	19.73	다소 진보	3,932	30.20	3,748	22.99	
자료 연도	2021	2,446	18.79	3,177	19.48	매우 진보	420	3.23	439	2.69	
						자료를 연도	2022	2,477	19.03	3,197	19.61
						연도	2023	2,367	18.18	3,125	19.16

## 2.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증세 수용태도에서는 청년세대의 평균값이 6.32점(표준편차 1.98), 중장년세대는 6.40

점(표준편차 1.9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세부 항목인 대인신뢰에서는 일반 사람, 이웃, 지인,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 모두 중장년세대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화된 호혜성 또한 중장년세대가 청년세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 네트워크 항목에서는 청년세대가 평균 2.60점, 중장년세대는 2.63점으로, 하루에 1~4명과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신뢰에서는 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군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서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청년 2.48점, 중장년 2.52점),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청년 1.99점, 중장년 1.98점).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적인 행정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더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국회는 반복적인 갈등 보도와 제도적 불신 등이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관용에서는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보다 장애인, 결손가정, 외국인 이민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외국인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중장년세대에서 더 높은 값이 관찰되었다.

표 5.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일반적 경향

변수	측정문항	최솟값	최댓값	청년		중장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복지증세 수용태도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정도	1	11	6.32	1.98	6.40	1.96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	1	4	2.55	0.59	2.59	0.58	
사회적 자본	이웃에 대한 신뢰	1	4	2.58	0.70	2.73	0.66	
	대인신뢰	1	4	2.91	0.65	2.92	0.63	
	처음 만난 사람 신뢰	1	4	1.84	0.67	1.89	0.68	
	국내 거주 외국인 신뢰	1	4	1.83	0.65	1.86	0.67	
	일반화된 호혜성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함	1	4	2.98	0.63	3.00	0.64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함	1	4	2.78	0.76	2.80	0.76	
	사회적 네트워크	하루 접촉 사람 수 (가족 또는 친척)	1	5	2.60	1.03	2.63	1.00
하루 접촉 사람 수 (가족 또는 친척 외)	1	7	3.15	1.07	3.01	1.04		
정부 신뢰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1	4	2.39	0.72	2.40	0.73	
	국회에 대한 신뢰	1	4	1.99	0.80	1.98	0.80	
	법원에 대한 신뢰	1	4	2.34	0.77	2.35	0.78	
	검찰에 대한 신뢰	1	4	2.28	0.79	2.29	0.80	
	경찰에 대한 신뢰	1	4	2.38	0.76	2.41	0.7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1	4	2.48	0.74	2.52	0.73	
	공기업에 대한 신뢰	1	4	2.46	0.73	2.48	0.73	
	군대에 대한 신뢰	1	4	2.45	0.77	2.50	0.75	
사회적 관용	장애인에 대한 포용 정도	1	5	3.12	0.90	3.07	0.92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포용 정도	1	5	3.42	1.04	3.32	1.03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포용 정도	1	5	2.80	0.97	2.72	0.94	
	전과자에 대한 포용 정도	1	5	1.49	0.81	1.48	0.81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정도	1	5	1.84	0.99	1.69	0.8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 정도	1	5	2.47	1.03	2.41	1.00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1	11	6.34	1.92	6.37	1.84	

### 3.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종속변수인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경우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변수들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관용,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의 순대로 높을수록 복지증세 수용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
복지증세 수용태도	1					
사회적 네트워크	0.048***	1				
대인신뢰	0.130***	0.067***	1			
일반화된 호혜성	0.233***	0.036***	0.149***	1		
정부신뢰	0.057***	0.018***	0.259***	0.081***	1	
사회적 관용	0.217***	0.096***	0.110***	0.092***	0.029***	1

\* $p < 0.1$ , \*\* $p < 0.05$ , \*\*\* $p < 0.01$ .

### 4.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태도와 사회적 자본 비교

현 청년세대는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강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이 관찰된다. 따라서 중장년세대에 비하여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적 자본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간 복지증세 수용태도와 사회적 자본(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 별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결속형 네트워크, 교량형 네트워크, 대인신뢰의 경우 Welch의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일반화된 호혜성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두 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어,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증세 수용태도는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차이의 크기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중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에서도 청년세대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으나, 사회적 네트워크는 오히려 중장년세대보다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위 측정요소인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 또는 친척 접촉 횟수로 측정한 결속형 네트워크와 가족 또는 친척 외 접촉 횟수로 측정한 교량형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흥미롭게도 결속형 네트워크의 경우,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 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교량형 네트워크의 경우,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 특성상 다양한 사회적 접점에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넓게 형성하는 청년세대의 경향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되 새로운 관계 형성에는 소극적일 수 있는 중장년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7. 복지증세 수용태도 및 사회적 자본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개념	유의 확률	Levene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 Welch의 t-검정						
		청년세대 평균 (N=13,018)	중장년세대 평균 (N=16,306)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복지증세 수용태도	.495	6.317	6.400	-3.453	29322.0	.001	.023	-.125	-.035	
사회적 네트워크	.904	6.880	6.797	4.224	27642.7	.000	.020	.044	.121	
사회적 자본	가족 / 친척	.000	2.603	2.631	-2.337	27471.4	.020	.012	-.051	-.004
	가족 / 친척 외	.000	3.153	3.015	11.145	27482.3	.000	.012	.114	.163
	대인신뢰	.000	15.293	15.589	-12.244	27875.4	.000	.025	-.355	-.257
	일반화된 호혜성	.321	5.758	5.802	-3.043	28016.4	.002	.014	-.072	-.015

### 5.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하였다.<sup>3)</sup>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가 1.04에서 1.9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한 결과 1.989로, 2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 잔차 간의 상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 중 사회적 네트워크를 투입하여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부신뢰와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의 간접효과 검증결과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 중 대인신뢰를 투입하여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신뢰는 정부신뢰( $\beta=.253, p<.001$ )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 $\beta=.113, p<.001$ )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와 정부신뢰를 동시에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모두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신뢰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경로의 효과 정도와 95% 신뢰구간에서 LLCI와 ULCI의 수치를 확인한 결과, 대인신뢰가 정부신뢰를 매개로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4~.01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 중 일반화된 호혜성을 투입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된 호혜성은 정부신뢰( $\beta=.090, p<.001$ )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 $\beta=.217, p<.001$ )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화된 호혜성과 정부신뢰를 동시에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모두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신뢰의 간접효과를 보기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LLCI와 ULCI의 수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표 11>에 따르면 일반화된 호혜성이 정부신뢰를 매개로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2~.006]로 나타나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위 결과들을 종합할 때,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 중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외한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정부신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가설3을 검증할 수 있었다.

3)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정부신뢰 및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문에는 PROCESS Macro를 활용한 주요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지면의 한계로 인해 Baron & Kenny 방식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 결과는 부록에 포함하였다.

표 8.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N=13,018)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SE	t	LLCI	ULCI	Adj R <sup>2</sup>	F
정부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005	.022	-.549	-.055	.031	.024	32.177***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013	.010	1.457	-.005	.034	.042	56.673***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013	.010	1.493	-.005	.034	.045	56.262***
	정부신뢰	.061***	.040	7.072	.020	.035		
정부신뢰	대인신뢰	.253***	.018	29.633	.485	.553	.086	122.130***
복지증세 수용태도	대인신뢰	.113***	.008	12.975	.089	.120	.054	74.017***
복지증세 수용태도	대인신뢰	.104***	.008	11.568	.080	.113	.055	68.793***
	정부신뢰	.035***	.004	3.964	.008	.024		
정부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090***	.031	10.260	.260	.382	.032	42.924***
복지증세 수용태도	일반화된 호혜성	.217***	.014	25.768	.327	.381	.088	125.733***
복지증세 수용태도	일반화된 호혜성	.213***	.014	25.245	.321	.375	.090	116.733***
	정부신뢰	.042***	.004	4.913	.012	.027		

주: 통제변수: 성별, 연령, 거주점유형태, 학력수준, 개인소득, 사회지위인식, 정치이념성향, 도시/농촌, 자료연도  
\* $p<0.1$ , \*\* $p<0.05$ , \*\*\* $p<0.01$ .

표 9. 정부신뢰의 간접효과 검정 결과

(N=13,018)

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사회적 네트워크→복지증세 수용태도)	.014	.010	-.005	.034
직접효과 (사회적 네트워크→복지증세 수용태도)	.015	.010	-.005	.034
표준화된 간접효과 (사회적 네트워크→정부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000	.001	-.002	.001
총효과 (대인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105	.008	.089	.120
직접효과 (대인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096	.008	.080	.113
표준화된 간접효과 (대인신뢰→정부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009	.002	.004	.014
총효과 (일반화된 호혜성→복지증세 수용태도)	.354	.014	.327	.381
직접효과 (일반화된 호혜성→복지증세 수용태도)	.348	.014	.321	.375
표준화된 간접효과 (일반화된 호혜성→정부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004	.001	.002	.006

## 6.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가 1.04에서 1.9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한 결과 1.992로, 잔차 간의 상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 중 사회적 네트워크를 투입하였을 때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용( $\beta=.165, p<.001$ )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복지증세 수용태도( $\beta=.013, p>.001$ )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 중 대인신뢰를 투입하여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인신뢰는 사회적 관용( $\beta=.089, p<.001$ )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 $\beta=.113, p<.001$ )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LLCI와 ULCI의 수치를 확인하였을 때 대인신뢰가 사회적 관용을 매개로 복지증세태도에 가지는 간접효과는 [.014~.02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 중 일반화된 호혜성을 투입하여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된 호혜성은 사회적 관용( $\beta=.093, p<.001$ )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 $\beta=.217,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화된 호혜성이 사회적 관용을 매개로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가지는 간접효과는 [.015~.020]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위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 중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외한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가설4를 검증할 수 있었다.

표 10. 사회적 자본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N=13,018)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SE	t	LLCI	ULCI	Adj R <sup>2</sup>	F
사회적 관용	사회적 네트워크	.165***	.024	6.942	.118	.211	.013	16.892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013	.010	1.457	-.005	.034	.042	56.673
복지증세 수용태도	사회적 네트워크	-.001	.010	-.070	-.020	.018	.088	114.067
	사회적 관용	.216***	.004	25.677	.085	.099		
사회적 관용	대인신뢰	.089***	.019	10.064	.157	.233	.017	22.251
복지증세 수용태도	대인신뢰	.113***	.008	12.975	.089	.120	.054	74.017
복지증세 수용태도	대인신뢰	.094***	.008	11.048	.072	.103	.097	126.233
	사회적 관용	.208***	.004	24.770	.081	.095		
사회적 관용	일반화된 호혜성	.093***	.034	10.584	.290	.422	.018	23.333
복지증세 수용태도	일반화된 호혜성	.217***	.014	25.768	.327	.381	.088	125.733
복지증세 수용태도	일반화된 호혜성	.199***	.014	24.003	.298	.351	.127	171.498
	사회적 관용	.198***	.004	23.954	.077	.091		

주: 통제변수: 성별, 연령, 거처점유형태, 학력수준, 개인소득, 사회지위인식, 정치이념성향, 도시/농촌, 자료연도  
\* $p<0.1$ , \*\* $p<0.05$ , \*\*\* $p<0.01$ .

표 11. 사회적 관용의 간접효과 검정 결과

(N=13,018)

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사회적 네트워크→복지증세 수용태도)	.015	.010	-.005	.034
직접효과 (사회적 네트워크→복지증세 수용태도)	-.001	.010	-.020	.018
표준화된 간접효과 (사회적 네트워크→사회적 관용→복지증세 수용태도)	.013	.002	.010	.017
총효과 (대인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105	.008	.089	.120
직접효과 (대인신뢰→복지증세 수용태도)	.087	.008	.072	.103
표준화된 간접효과 (대인신뢰→사회적 관용→복지증세 수용태도)	.019	.002	.014	.023
총효과 (일반화된 호혜성→복지증세 수용태도)	.301	.009	.284	.318
직접효과 (일반화된 호혜성→복지증세 수용태도)	.271	.009	.254	.288
표준화된 간접효과 (일반화된 호혜성→사회적 관용→복지증세 수용태도)	.018	.001	.015	.020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그리고 심화되는 인구 위기와 집단 갈등 속에서, 청년세대가 복지증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중장년세대와의 사회적 자본 및 복지증세 수용태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신뢰·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간의 복지증세 수용태도 및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청년세대 구성원의 복지증세 수용태도는 중장년세대 구성원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평균 차이의 크기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청년세대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에서 중장년세대보다 유의미한 낮은 수준이 관찰되었으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세대보다 높은 수준이 관찰되었다. 이를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나누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결속형 네트워크의 경우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보다 낮게, 교량형 네트워크의 경우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Putnam(2002)이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으로 구분하고, 결속형은 동질적인 집단 내부의 유대를 강화하는 반면 교량형은 서로 다른 집단 간 연결을 촉진한다고 설명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청년세대의 교량형 네트워크가 높게 나온 것은, 이들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활동 과정에서 맺게 되는 다양하고 느슨한 사회적 접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 측면에서 청년세대는 취직, 직업활동, 혼인, 출산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속과 연결망을 옮겨가며 새로운 문을 두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중장년세대와 비교할 때 결속형 연결망보다 교량형 연결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의 경우 중장년세대가 청년세대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세대 구성원들이 새로운 연결을 맺는 데에는 소극적이지만, 깊고 중첩된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외한 대인신뢰·일반화된 호혜성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정부신뢰 및 사회적 관용을 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에 따라 제도에 대한 태도 형성 경로가 상이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은 상호 독립적인 요소라기보다 사회관계의 형성과 심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생성되고 순환적으로 강화되는 관계에 있다. 사회적 자본의 생성은 구조적 기반인 네트워크의 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 간의 반복적 상호작용 경험은 개인과 집단 간의 신뢰 형성을 촉진하며(Putnam, 1995; Uslaner, 2002), 축적된 신뢰는 직접적 보상과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대한 일반화된 호혜성과 같은 규범으로 내면화된다(Sahlins, 1972; Axelrod & Hamilton, 1981). 이러한 네트워크-신뢰-호혜성의 순환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작동 메커니즘으로서 논의되어 왔다(Nahapiet & Ghoshal, 1998).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은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와 공정성 인식을 내포하는 인지적·규범적 자본으로서(Gouldner, 1960; Sahlins, 1972; Keohane, 1986; Fukuyama, 2002), 이러한 인식이 정부가 조세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할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연결의 빈도나 범위를 반영하는 구조적 자본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제도의 공정성이나 정책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를 청년 및 중장년세대 간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 분석 결과와 함께 연결해볼 때, 청년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교량형 연결망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들의

구직과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약한 연결망, 즉, 정보와 기회 탐색에 유리한 교량형 연결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Granovetter, 1973; Bridges & Villemez, 1986; Coleman, 1988; Lin, 2000). 교량형 연결망 중심의 청년세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들이 양적으로 다양한 개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연결된 사회적 자본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만이 정부신뢰, 사회적 관용을 통해서 복지증세 수용태도로 연결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복지증세와 같은 부담 수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단순한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질적 축적 및 제도 신뢰에 매개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서 복지증세 수용태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차별적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인지적·규범적 자본인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중심의 구조적 자본은 그 자체로는 정책 태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를 중장년세대와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차이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도 그간 약한 연결망(weak ties)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강한 연결망(strong ties)의 질적 역할의 중요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얇은 관계를 통하여 정보 및 기회 탐색에 유리한 약한 연결망과 달리, 강한 연결망은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제공하며 신뢰와 호혜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양적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전환은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질적 약화는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청년세대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시대적·구조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 청년세대는 성장 과정에서는 높은 사교육 경쟁과 입시 중심의 선발 구조를, 성인기 진입 이후에는 치열한 취업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경험해 왔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속에서 학력·지역 기반의 차별과 주거환경 악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회적 관계를 협력보다 경쟁의 관점에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불평등을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경쟁에 의한 정당한 결과로 수용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등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자본과 관용이 약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 역시 이들 세대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모순적 측면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COVID-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수업·상호작용의 확산은 청년세대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심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한하였다. 이는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코로나19를 경험한 세대, 즉 2026년 현재 20대에 해당하는 청년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비대면 소통 방식의 확산 등으로 양적인 연결은 확대된 반면, 질적 신뢰와 호혜성의 축적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 연결성에 비해 인지적·규범적 측면에서 취약한 양상을 보이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입시·취업·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온 청년세대의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개인이 보유한 자원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며, 자원 손실 회피와 위험 민감성이 이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Hobfoll, 1989; Kahneman & Tversky, 2013). 이는 복지증세와 같이 개인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증세와 같은 부담 수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확충이나 세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소득 양극화, 인구 절벽,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및 공공재정의 확충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를 수반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지원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 복지증세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공정한 복지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 관용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함께 병행하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경쟁이 곧 공정’이라는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현 청년세대는 이러한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 해왔다. 본 연구는 타인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동행자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곧 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청년세대에서, 사회적 자본의 질적 약화와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는 복지증세와 같은 국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Smith(1759)는 저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개인은 자신이 선망하는 인물에 공감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고 더 일찍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분류되는 싱가포르와, 사회통합과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공직자의 검소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적 성공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나치게 선망하고, 일부에서는 윤리적 논란이 있는 인물조차 성취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년세대가 미디어와 사회적 담론을 통해 검소함과 책임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 지도층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면, 서서히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존과 같은 보다 다차원적인 사회적 목표를 지향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증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질적 회복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경계심의 완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될 때,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제도 및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쟁 심화가 복지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복지증세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증세 수용태도를 둘러싼 논의를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제도적 요인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 및 인식적 차원에서 재고찰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최근 5개년도 자료를 합산하여 Pooled OLS로 분석한 횡단면 연구라는 점이다.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Mill의 세 가지 조건 중 시간적 선행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년도 자료를 활용한 패널데이터 기반의 종단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시간적 선행성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인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려고 시도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개인소득, 거처점유형태, 사회지위인식, 정치이념성향, 도시/농어촌 거주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대상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복지증세 수용태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기 이해적 관점이 의미하는 사회계층에는 소득수준, 학력수준, 인종 외에도 우리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더욱 세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증세 수용태도 측정에는 개념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이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복지증세 전반에 대한 일반적 태도라기보다는 재분배적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태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증세를 정책 유형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보편적 복지나 사회보험 방식의 증세 태도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조세 기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복지정책 유형별 태도를 구분한 보다 정교한 측정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일방향적인 설문조사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즉, 응답자가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의 수(물리적 차원), 사회집단별 신뢰하는 정도(인지적 차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당위적 차원)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일방적으로 타인과 사회에 대해 인지하는 내용을 측정한 것이다. 반면 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방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개인과 집단별 중첩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네트워크의 중첩도가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속형·교량형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는 가족 친척과의 접촉과 그 외의 접촉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결속형 네트워크를 충분히 포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즉 결속형 네트워크는 가족 친척뿐 아니라 노동조합,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목적 기반의 다양한 소속집단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측정 문항만으로는 이러한 결속형 관계의 범위와 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네트워크 측정 문항 또는 실제 관계망 자료를 활용하여, 결속형·교량형 네트워크의 차별적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비교를 주로 확인적 분석 수준에서 다루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절효과 모형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해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년도 자료와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나경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및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행태론, 상대소득효과, 사회적 자본이며, 현재 역량이론, 불평등, 정부신뢰, 행복 및 삶의 질, 이주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nklee@snu.ac.kr)

## 참고문헌

- 강정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Collection shya. [https://lib.shyu.ac.kr/C\\_WebHYU/Search/Advence\\_Search#/basic/detail/124207](https://lib.shyu.ac.kr/C_WebHYU/Search/Advence_Search#/basic/detail/124207)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연계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162-186.
- 김동욱, 홍상우, 이숙중. (2023).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공정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69-194.
- 김민주. (2017). 사회자본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135-161.
- 김신영.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사회적 신뢰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61-572.
- 김신영. (2023). 새로운 세대정신: 한국청년세대의 복지태도 지형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9(6), 17-23.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영순, 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3), 109-142.
- 김은미. (2018). 연결된 개인의 탄생.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 (2014).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책임지지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105-141.
- 박천오. (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행정논총*, 37(2), 47-71.
- 박치성, 백두산, 정창호. (2018). 사악한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협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근혜 정부의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5(2), 83-113.
- 박태정. (2017). 노인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8(4), 429-445.
- 박희봉. (2018). 정부신뢰의 본질: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한국행정연구*, 27(4), 1-34.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5-34.
- 손호중,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2-221.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225-256.
- 원숙연, 정하나. (2014). 새로운 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 지형: 한국사회, 한국인,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303-334.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이민호. (2021). 한국 복지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103-131.
- 이상복, 김형관. (2021). 한국사회 복지태도 유형의 변화와 영향 요인-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이중적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255-286.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이승주, 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 이아름, 김사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264.
- 이영수. (2025). 복지수급 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1), 77-103.
- 이지호, 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 이현우. (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3), 95-119.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장충권. (2005).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자본: 연결망, 신뢰, 호혜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https://dcollec.tion.yonsei.ac.kr/public\\_resource/pdf/000000111254\\_20260209001611.pdf](https://dcollec.tion.yonsei.ac.kr/public_resource/pdf/000000111254_20260209001611.pdf)
- 전종우. (2020).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차이. *광고학연구*, 31(4), 109-124.
- 조정하, 김성한. (2018).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1), 86-110.
- 주혜린, 황정윤. (2020).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465-483.
- 한국은행. (2023. 11. 30.).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menuNo=200066&mttId=10080881>
- 한상미. (2007).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연구. *사회복지정책*, 31(1), 211-237.
- 함철호, 이중섭. (2010). 지역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기이해, 사회화, 이데올로기, 수급자에 대한 태도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99-325.
- 홍영란.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RR2007-16).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6120>
-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31-62.
- Alesina, A., Miano, A., & Stantcheva, S. (2023). Immigration and redistribu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90(1), 1-39.
-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4489), 1390-139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äck, M., & Kestilä, E. (2009).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trust in Finland: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2), 171-194.
- Bogardus, E. 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65-271. <https://psycnet.apa.org/record/1933-03965-001>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Greenwood Press.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https://www.jstor.org/stable/2111684>
- Bridges, W. P., & Villemez, W. J. (1986). Informal hiring and income in the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574-582. <https://doi.org/10.2307/2095589>
- Boix, C., & Posner, D.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693. <https://doi.org/10.1017/S0007123498000313>
- Cohen, S., Underwood, L. G., & Gottlieb, B. H. (Eds.).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95-120. <https://www.jstor.org/stable/2780243>
- Cooley, C. H. (1972). *The looking glass self*. Allyn & Bacon.
- Craig, S. C., Gainous, J., & Martinez, M. D. (2006).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social welfare: The role of ambivalence* [Conference presentation].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PA, United States.
- Crepaz, M. M., & Damron, R. (2009). Constructing tolerance: How the welfare state shapes attitudes about immigran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3), 437-463.
- Duck, S. (2010). *Rethinking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 Emirbayer, M., & Goodwin, J. (1994).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6), 1411-1454.
- Ervasti, H. J., Andersen, J. G., Fridberg, T., & Ringdal, K. (Eds.). (2012).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Social policy attitudes and social capital in Europe*. Edward Elgar Publishing.
- Fukuyama, F. (2002).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SAIS Review*, 22(1), 23-37. <https://muse.jhu.edu/article/30574>
- Gilens, M. (1995). Racial attitudes and opposition to welfare. *The Journal of Politics*, 57(4), 994-1014.
- Gouldner, A.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2), 161-176.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ootaert, C. (1986). *The role of employment and earnings in analyzing levels of living: A general methodology with applications to Malaysia and Thailand*. The World Bank.
- Hadler, M. (2012). The influence of world societal forces on social tolerance: A time comparative study of prejudices in 32 countries. *Sociological Quarterly*, 53(2), 211-237.
- Hall, S., & Jacques, M. (1989).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awrence and Wishart.
- Hetherington, M.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tlin, P., & Shutava, N. (2022). Trust in Government. *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 and Freedman Consulting*.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524.
- Jhang, F. H. (2022). Bonding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trust: The mediating role of trust in public figures in Taiwan. *The Social Science Journal*, 59(1), 71-84.
- Kahneman, D., & Tversky, A. (2013).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In L. C. MacLean & W. T. Ziemba (Eds.), *Handbook of the fundamentals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Part II* (4th ed., pp. 99-127). World Scientific Publishing.
- Keohane, R. O. (1986).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1), 1-27.
- Klor, Esteban F., & Moses Shaoy, (2010). Social identity and preferences over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3-4), 269-278. <https://doi.org/10.1016/j.jpubeco.2009.12.003>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Kegan Paul.
- Kumlin, S., & Rothstein, B. (2005). Making and breaking social capital: The impact of welfare-state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4), 339-365.
- Lee, F. L. (2014). Tolerated one way but not the other: Levels and determinants of social and political tolerance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8(2), 711-727. <https://doi.org/10.1007/s11205-013-0433-5>
- Li, X. S. (2010). Social identities, ethnic diversity, and tax morale. *Public Finance Review*, 38(2), 146-177. <https://doi.org/10.1177/1091142110369239>
- Lim, J., & Moon, K. (202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a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the role of perceived tax burden. *Sustainability*, 14(12), 7171. <https://doi.org/10.3390/su14127171>
- Lin, 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Lipset, S. M., & Man, P. (1960).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 M., & Schneider, W. (1983). The decline of confidence in American institu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8(3), 379-402. <https://www.jstor.org/stable/2150494>
- Luhmann, N. (2000).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pp. 94-107). University of Oxford, Department of Sociology.
- Luttmer, E. F. (2001). Group loyalty and the taste for re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3), 500-528.
-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https://doi.org/10.5465/amr.1995.9508080335>
- Mishra, J., & Attri, V. (2020). Governance, public service delivery and trust in government. *Studies in Indian Politics*, 8(2), 186-202.
- Misztal, B. A. (2001). Trust and cooperatio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Journal of Sociology*, 37(4), 371-386.
- Muller, E. N. (1977). Behavioral correlates of political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2), 454-467. <https://doi.org/10.2307/1978341>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https://doi.org/10.5465/amr.1998.533225>
- Newton, K., & Norris, P.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p. 52-7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strom, E. (1990). *Social capital: A fad or a fundamental concept?* Indiana University Press.
- Pharr, S. J., & Putnam, R. D. (Eds.).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Putnam, R. D. (2002).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Rapp, C. (2016). Shaping tolerant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The role of welfare state expenditur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7(1), 40-56.
- Robbins, B. G. (2012). Institutional quality and generalized trust: A nonrecursive causal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2), 235-258.
- Rothstein, B., Samanni, M., & Teorell, J. (2012). Explain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vs. the quality of govern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1), 1-28. <https://doi.org/10.1017/S1755773911000051>
-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https://doi.org/10.5129/001041508X12911362383354>
- Rothstein, B., &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Aldine de Gruyter.
- Scott, J. (2011). Social network analysis: Developments, advances, and prospects. *Social Network Analysis and Mining*, 1(1), 21-26.
- Smith, A. (2010).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enguin. (Original work published 1759)
- Stantcheva, S. (2024). Perceptions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xford Open Economics*, 3(Suppl. 1), i96-i100.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33, 1-39.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Oordt, M. (2019).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on taxation. SSRN. <http://dx.doi.org/10.2139/ssrn.3370907>
- Walzer, M. (1997). On toler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12), 1664-1689.
- Weber, L. (2003). Rugged individuals and social butterflies: the consequences of social and individual political participation for political tolerance. *The Social Science Journal*, 40(2), 335-342. [https://doi.org/10.1016/S0362-3319\(03\)00014-4](https://doi.org/10.1016/S0362-3319(03)00014-4)
- Young, I. M. (2009).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Organizational Behavior*, 8, 1840-1920.

부록

부표 1. 사회적 자본(사회적 네트워크/대인신뢰/일반화된 호혜성)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N=13,018)

구분	1단계: 네트워크→복지태도		2단계: 네트워크→정부신뢰		3단계: 네트워크·정부신뢰→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98.072		-621.619		315.312		
연령	-0.009	-0.023**	-0.013	-0.015*	-0.009	-0.022**	
성별	-0.119	-0.030***	-0.274	-0.031***	-0.112	-0.028***	
학력수준	0.101	0.039***	-0.018	-0.003	0.102	0.039***	
개인소득	0.000	-0.002	0.000	-0.007	0.000	-0.002	
주거점유	-0.007	-0.003	0.020	0.004	-0.008	-0.004	
사회지위	0.212	0.163***	0.302	0.104***	0.204	0.156***	
정치성향	0.115	0.042***	0.118	0.020**	0.112	0.041***	
도시농촌	-0.151	-0.027***	0.087	0.007	-0.153	-0.027***	
자료연도	-0.145	-0.105***	0.316	0.104***	-0.154	-0.111***	
독립변수	네트워크	0.014	0.013	-0.012	-0.005	0.015	0.013
매개변수	정부신뢰					0.028	0.061***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0.204 / 0.042 / 56.673***		0.155 / 0.024 / 32.177***		0.213 / 0.045 / 56.262***		
구분	1단계: 대인신뢰→복지태도		2단계: 대인신뢰→정부신뢰		3단계: 대인신뢰·정부신뢰→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82.863		-676.112		293.667		
연령	-0.008	-0.021**	-0.009	-0.011	-0.008	-0.021**	
성별	-0.120	-0.030***	-0.279	-0.032***	-0.115	-0.029***	
학력수준	0.053	0.020**	-0.051	-0.009	0.054	0.021**	
개인소득	0.000	0.035***	0.000	-0.015	0.000	0.036***	
주거점유	-0.002	-0.001	0.047	0.009	-0.003	-0.001	
사회지위	0.190	0.146***	0.184	0.064***	0.187	0.143***	
정치성향	0.107	0.039***	0.071	0.012	0.106	0.039***	
도시농촌	-0.132	-0.024***	0.186	0.015*	-0.135	-0.024***	
자료연도	-0.138	-0.100***	0.341	0.112***	-0.144	-0.104***	
독립변수	대인신뢰	0.105	0.113***	0.519	0.253***	0.096	0.104***
매개변수	정부신뢰					0.016	0.035***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0.232 / 0.054 / 74.017***		0.293 / 0.086 / 122.130***		0.235 / 0.055 / 68.793***		
구분	1단계: 호혜성→복지태도		2단계: 호혜성→정부신뢰		3단계: 호혜성·정부신뢰→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65.168		-645.133		277.434		
연령	-0.008	-0.021**	-0.012	-0.014	-0.008	-0.020**	
성별	-0.100	-0.025***	-0.257	-0.029***	-0.095	-0.024***	
학력수준	0.072	0.028***	-0.008	-0.001	0.072	0.028***	
개인소득	0.001	0.039***	0.000	-0.007	0.001	0.039***	
주거점유	-0.006	-0.003	0.022	0.004	-0.007	-0.003	
사회지위	0.191	0.146***	0.280	0.097***	0.186	0.142***	
정치성향	0.092	0.034***	0.095	0.016*	0.090	0.033***	
도시농촌	-0.133	-0.024***	0.104	0.008	-0.135	-0.024***	

구분	1단계: 네트워크→복지태도		2단계: 네트워크→정부신뢰		3단계: 네트워크·정부신뢰→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자료연도	-0.130	-0.094***	0.327	0.107***	-0.136	-0.099***	
독립변수	호혜성	0.354	0.217***	0.321	0.089***	0.348	0.213***
매개변수	정부신뢰				0.019	0.042***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0.300 / 0.088 / 125.733***		0.179 / 0.032 / 42.924***		0.300 / 0.090 / 116.733***		

부표 2. 사회적 자본(사회적 네트워크/대인신뢰/일반화된 호혜성)과 복지증세 수용태도 간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N=13,018)

구분	1단계: 네트워크→복지태도		2단계: 네트워크→관용		3단계: 네트워크·관용→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89.819		60.044		247.609		
통제변수	연령	-0.009	-0.024**	-0.040	-0.043***	-0.005	-0.013
	성별	-0.100	-0.025**	0.158	0.017*	-0.116	-0.029***
	학력수준	0.092	0.035***	0.160	0.026***	0.076	0.029***
	개인소득	0.000	0.031***	0.000	-0.014	0.000	0.032***
	주거점유	-0.056	-0.025**	0.168	0.031***	-0.067	-0.030***
	사회지위	0.208	0.162***	-0.028	-0.009	0.211	0.164***
	정치성향	0.118	0.044***	0.330	0.051***	0.082	0.030***
	도시농촌	-0.158	-0.028***	-0.534	-0.040***	-0.091	-0.016*
	자료연도	-0.141	-0.081***	-0.030	-0.009	-0.120	-0.069***
	독립변수	네트워크	0.008	0.007	0.165	0.061***	-0.011
매개변수	사회적 관용				0.092	0.220***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0.204 / 0.042 / 56.673***		0.113 / 0.013 / 16.892***		0.297 / 0.088 / 114.067***		

구분	1단계: 대인신뢰→복지태도		2단계: 대인신뢰→관용		3단계: 대인신뢰·관용→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82.863		-2.929		283.122		
통제변수	연령	-0.008	-0.021**	-0.041	-0.044***	-0.005	-0.012
	성별	-0.120	-0.030***	0.160	0.017*	-0.134	-0.034***
	학력수준	0.053	0.020**	0.162	0.026***	0.039	0.015*
	개인소득	0.001	0.035***	0.000	-0.013	0.001	0.038***
	주거점유	-0.002	-0.001	0.177	0.033***	-0.018	-0.008
	사회지위	0.190	0.146***	-0.057	-0.018**	0.195	0.149***
	정치성향	0.107	0.039***	0.331	0.051***	0.078	0.029***
	도시농촌	-0.132	-0.024***	-0.503	-0.038***	-0.087	-0.016*
	자료연도	-0.138	-0.100***	0.000	0.000	-0.138	-0.100***
	독립변수	대인신뢰	0.105	0.113***	0.195	0.089***	0.087
매개변수	사회적 관용				0.088	0.208***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0.232 / 0.054 / 74.017***		0.130 / 0.017 / 22.251***		0.311 / 0.097 / 126.233***		

구분	1단계: 호혜성→복지태도		2단계: 호혜성→관용		3단계: 호혜성·관용→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65.168		-10.769		266.071		
통제변수	연령	-0.008	-0.021**	-0.041	-0.044***	-0.005	-0.012
	성별	-0.100	-0.025***	0.181	0.019**	-0.115	-0.029***
	학력수준	0.072	0.028***	0.186	0.030***	0.056	0.022**

구분	1단계: 네트워크→복지태도		2단계: 네트워크→관용		3단계: 네트워크·관용→복지태도		
	B	$\beta$	B	$\beta$	B	$\beta$	
개인소득	0.001	0.039***	0.000	-0.010	0.001	0.041***	
주거점유	-0.006	-0.003	0.169	0.031***	-0.020	-0.009	
사회지위	0.191	0.146***	-0.036	-0.012	0.194	0.148***	
정치성향	0.092	0.034***	0.324	0.050***	0.065	0.024***	
도시농촌	-0.133	-0.024***	-0.522	-0.040***	-0.090	-0.016*	
자료연도	-0.130	-0.094***	0.004	0.001	-0.130	-0.094***	
독립변수	호혜성	0.354	0.217***	0.356	0.093***	0.324	0.199***
매개변수	사회적 관용				0.084	0.198***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0.297 / 0.088 / 125.733***		0.133 / 0.018 / 23.333***		0.356 / 0.127 / 171.498***	

\* $p < 0.1$ , \*\* $p < 0.05$ , \*\*\* $p < 0.01$ .

# Social Capital and the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among Young Adults:

## The Mediating Roles of Government Trust and Social Tolerance

Lee, Nakyung<sup>1</sup>

<sup>1</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

South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a demographic crisis marked by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and a transition toward a super-aged society. At the same time, rising unemployment and income inequality have intensified socio-economic instability and social conflicts, making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financing and public consensus on taxation increasingly critical policy challenges.

This study investigates generational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and welfare tax increase acceptance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adults and examines the mediating roles of government trust and social tolerance. Drawing on survey data from 13,018 young adults and 16,306 middle-aged adults, the analysis employed independent samples t-tests and bootstrapping procedures using SPSS PROCESS Macro 4.2.

The results show that young adults exhibit lower levels of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interpersonal trust, and generalized reciprocity than middle-aged adults, while showing a distinct pattern in social networks characterized by lower bonding ties and higher bridging ties. Furthermore, interpersonal trust and generalized reciprocity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through government trust and social toler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wer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among young adults is shaped by heightened loss aversion in competitive and uncertain environments, and that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trust in institutions and tolerance toward other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y approaches that combine institutional reform with social integration by strengthening trust and the qualitative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Keywords:**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Social Capital, Government Trust, Social Tolerance, Cross-Generational Contexts